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2006년도 제3차 회의

1. 일 자 2006년 1월 26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박 승 의 장 (총 재)  
김 태 동 위 원  
이 성 태 위 원 (부총재)  
김 종 창 위 원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이 상 용 감사 정 규 영 부총재보  
정 방 우 부총재보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정 대 영 금융안정분석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김 수 호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6. 회의경과

#### <의안 제4호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특별대출 등 실시>

(1) 담당부총재보가 금융시장의 안정도모 차원에서 정부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2005.3.23)에 따른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별대출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동 제안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한국산업은행에 대출한 자금을 동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대대출하고 한국은행이 동 공사에 대해 통안증권을 상대매출함으로써 유동성을 흡수하는 내용인데 한국은행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한 선례가 있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1992년도에 3개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7개 시중은행을 통해 2조 9천억원을 저리로 대출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는 데 있어 직접출연 방식이 아닌 전대대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직접출연의 경우 유동성환수를 위한 통안증권발행이 생략되어 업무처리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직접증여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전대대출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신용불량자대책에 한국은행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전대대출시 납부하여야 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료의 면제조치가 수반되면 동 대책에 대한 범정부적인 합의의 성격이 더욱 보강되기 때문에 전대대출이 직접출연보다 더 나은 지원방식이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채무 재조정 지원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정부의 금융채무 경감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것은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 확인해 본 결과 2004년 5월 출범했던 신용회복프로그램인 「한마음금융」의 탈락자 즉, 신용회복 승인시 원금의 3%를 납입하여 이자를 감면받았지만 최장 8년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는 원금상환에 실패한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채무 경감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동 위원회는 본건의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를 지원받는 사람들로서 본인의 경제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채무가 재조정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복지정책적 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그 재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원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회는 거시적으로 볼 때 지금은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시장이 스스로 시장원리에 따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장실패의 상황이므로 정부 등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장질서를 복구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채무 재조정에 대한 지원은 보조적 성격이 아니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의 일부이므로 금융안정의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회는 금융안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 출연을 한 사례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채무재조정도 유사한 목적으로 실시되므로 당행의 지원이 타당하다는 점이 있으나, 채무불이행자들의 주요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들이 지난해에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대신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회는 의안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규모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전대대출과 관련

한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면제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정확한 대출규모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였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첫째, 금융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여신행위를 함에 있어 소득, 재산,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신취급 금융기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해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었더라도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상당한 순이익을 획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여신취급 금융기관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둘째,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전대대출 대신 단순하고 투명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적합한 출연에 의한 지원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본건은 금융안정, 경제회생 목적이 섞여 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 중앙은행과도 관련이 있고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 문제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금번 지원이 한은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고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에도 부합되며 과거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한 선례도 있는데다 국가적인 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다만, 김태동 위원과 이성남 위원은 원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

#### 의결사항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별대출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특별대출 등 실시>

1.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가. 이 율 : 연 2.0%

나. 규 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채무재 조정 소요자금\*과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취급비용 및 한국 은행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

\* 관련 채권 현금매입대금(250억 71백만원)에서 뉴브리지캐피탈 의 동 공사앞 기증 사회공헌기금(100억원)을 차감

다. 기 간 : 1년 이내

라. 취급시기 : 2006년 2월중

마. 형 식 : 어음대출

바. 담 보 :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권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발행

가. 방 식 : 상대대출

나. 금리(수익률) : 연 6.0% 이내

다. 규모, 만기 및 시기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과 연계하여 결정

라. 기 타 : 한국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관련 채권의 회수대 금 분배 등에 관한 부대조건을 부과

3. 대출실행 등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실행, 한국산업은행의 한국자산 관리공사앞 대출이율, 한국자산관리공사앞 한국은행통화 안정증권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재가 결정